

제227회 임시회
2004. 5. 18(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200 |
|----------|-----|

제안년월일: 2004.5.18.

제안자: 산업경제위원장

1. 주 문

- 어려운 농정 현실속에서도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정책은 부단히 발전하여 왔으나, 금번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4%인하한다는 발표에 대하여 전 도민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큰 실망감에 휩싸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2. 제안 이유

- 지난 5.11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쌀 농가의 소득 보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국회에 상정한 것은 농가부채의 증가와 농업의 붕괴를 가속시킬 수 있어 전 도민과 함께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의견의 제시와 국회에서 정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건의코자 함.

3. 참고사항

“없 음”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국회의장, 각정당
대표, 국무총리, 농림부장관)님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민족의 생존 근간인 농업의 현안해결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150만 충청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 5일에는 100년만에 처음이라는 폭설로 우리 충청지역에서만도 그 피해액이 1,900여억원에 달하는 등 현재의 농촌 실정은 이루 형언할 수조차 없으며, 2년간 연속된 태풍과 조류독감 피해에 이어 한·칠레 FTA타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5. 11일에는 정부가 2004년산 추곡수매가 4%인하와 아울러 수매량도 감축키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는 발표를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전도민과 함께 농촌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과 심한 박탈감을 금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금년도 추곡수매가 4%인하 결정을 정부는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전년도보다 10%이상 인상하여야 합니다.

지난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년도 추곡수매가 4%인하 계획은 쌀이

우리 농업의 75%이상을 차지하고, 농업소득에서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데에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더욱 위기로 몰아가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우리나라 시장가격의 기준이 되는 추곡수매값마저 인하한다면 농민들이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며 이는 곧 농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므로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쌀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10%이상 인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정부는 쌀농가의 소득 보전을 통하여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에는 한·칠레 FTA, DDA협상 등으로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팽배하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과 쌀 협상 등의 대책으로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쌀농업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농가 소득보전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쌀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임을 명심하고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생산성 향상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정부는 우리의 농촌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실현성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국제농업환경의 변화와 개방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농업정책실패에 의한 농가부채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와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촌경제를 활력화시킬 수 있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실현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150만 도민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농업인들의 생존기반과 농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수 없음을 거듭 밝히면서 금년도 추곡수매가 인하 정부(안)을 반드시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4년 5 월 18 일

충청북도의회의원일동